

# 학생부 '순위 매기기' 완화... 내신 부풀리기 우려도

**교육부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3월 새학기부터 중·고교 적용  
공동교육과정엔 석차평가 없애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강화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 학생부 석차 평가가 완화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교과목을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을 수강할 경우 석차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 마련을 위해 '학생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업이 어려운 소인수·신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보통교과	공통과목	5단계 (단, 과학탐구실험 3단계)
	선택과목	일반선택 5단계 (단, 교양과목: 이수여부, 체육·예술: 3단계) 진로선택 3단계
전문교과	전문교과 I	5단계 (단, 실습형 과목 및 과제 중심 과목은 3단계)
	전문교과 II	5단계

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 관계없이 모든 공동교육과정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고등학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718과목이 개설돼 학생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석차 등급 미산출이 적용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개 시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새로 운영되면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육과정에서 석차등급을 산출하

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듣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높이는 악용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종우 양재고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악용사례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도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석차 등급 미산출 기준인 13명 이하로 운영되면서 학생부 성적을 올리는

용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일단 관찰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과목별 20명 이하,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은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학기별 2개 과목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확대될 경우,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장주영 사무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들이 많아서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원활하다. 반면 도지역은 학생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시도별 상황이 달라 시도별 개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신설된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예술교과에만 3단계 평가를, 나머지 대다수 교과는 5단계(A~E)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교과목에서는 기존 5단계 평가에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경우 A를 받았다면, 3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게 돼 학생들의 석차 평가가 완화되는 셈이다.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부에 석차 등급과 병기돼 적용돼 왔지만, 대학 입시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성취도 평가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성취도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공공기관 476곳, 2만6000명 신규채용 계획

준정부기관·부설기관 등 계획 포함  
블라인드 채용은 10곳 중 4곳 검토

올해 국내 공공기관 476곳에서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규모는 2만6000여명에 달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은 10곳 중 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가 전국 1153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1.3%인 476곳에서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2만 6000여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2018 공공기관 채용계획' 조사에서는 324곳 2만 2876명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600여 곳에 달하는 자자체 출연기관과 준정부기관, 부설기관 채용 계획도 포함돼, 채용기관수와 채용인원이 증가했다.

채용계획을 검토중인 곳도 49.4%였



고,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이 97곳 중 92곳(94.8%)으로 신규채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공공기관은 239곳 중 202곳(84.5%), 부설기관은 34곳 중 23곳(67.6%)이 신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공기업은 182곳 중 70곳(38.5%)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출연기관 601곳 중 89곳(14.8%)만 신규 채용할 방

침이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기타공공기관이 9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 8041명, 준정부기관 6990명, 출연기관 1637명, 부설기관 844명 순이었다.

채용규모를 확정된 기관은 총 20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1곳당 평균 신규 채용인원은 공기업이 1곳당 1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출연기관(18명) 평균보다 6배 많은 수치다. 이밖에 준정부기관(76명), 기타공공기관(46명), 부설기관(37명)으로 조사됐다.

채용시기는 1분기 채용 기관이 22.2%로 가장 많았고, 2분기 5.8%, 3분기 4.0%, 4분기 1.0%로 집계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 10곳 중 약 4곳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관은 26.6%였고, 올해 도입 예정인 곳은 8.2%로 나타났다.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곳은 2.5%로 나와 전체의 37.3%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 성결교회, '문화센터'로 시민에 돌아온다

87년의 역사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 서울 체부동 성결교회가 시민을 위한 생활 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나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를 새단장해 오는 3월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재 탄생한다고 31일 밝혔다. 본당은 시민 생활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한옥은 마을 카페로 활용한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

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이다.

1931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체부동 성결교회'는 87년의 역사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이다. 신축 당시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와 미국식 벽돌쌓기 방식을 적용하는 등 벽돌쌓기 방식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 준다.

또한 교회 예배당 동측 벽에는 건축 초기 남녀가 따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 출입구(2개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붕은 목조 트러스(truss) 구조로 근대 건축양식 그대로 복원됐다. 트러스는 부재가 3각형을



체부동 성결교회. /연합뉴스

단위로 짜여진 구조 형식으로, 에펠타워 같은 건축물이나 교량에 주로 사용된다.

교회 외벽면은 프랑스식 벽돌쌓기와 영국식 벽돌쌓기가 함께 공존하는 벽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청탁금지법 걱정없는 '축하 화환'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신화환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문 플로리스트가 생화로 만든 10만원 이하의 축하 화환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신화환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문 플로리스트가 생화로 만든 10만원 이하의 축하 화환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위·과장광고 '학원' 불법행위 특별점검

교육부 등 정부기관 9곳 협력

교육부 등 정부 기관 9곳이 협력해 선행학습 유발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 지역이다.

교육부는 31일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의장 교육부 박춘란 차관)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 합동 지도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17개 시도 교육청도 합동점검 기간 중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지도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자유허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이 적발될 수 있다.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의 여부와 유아 교육 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점검을 강화해 왔다. /한용수 기자